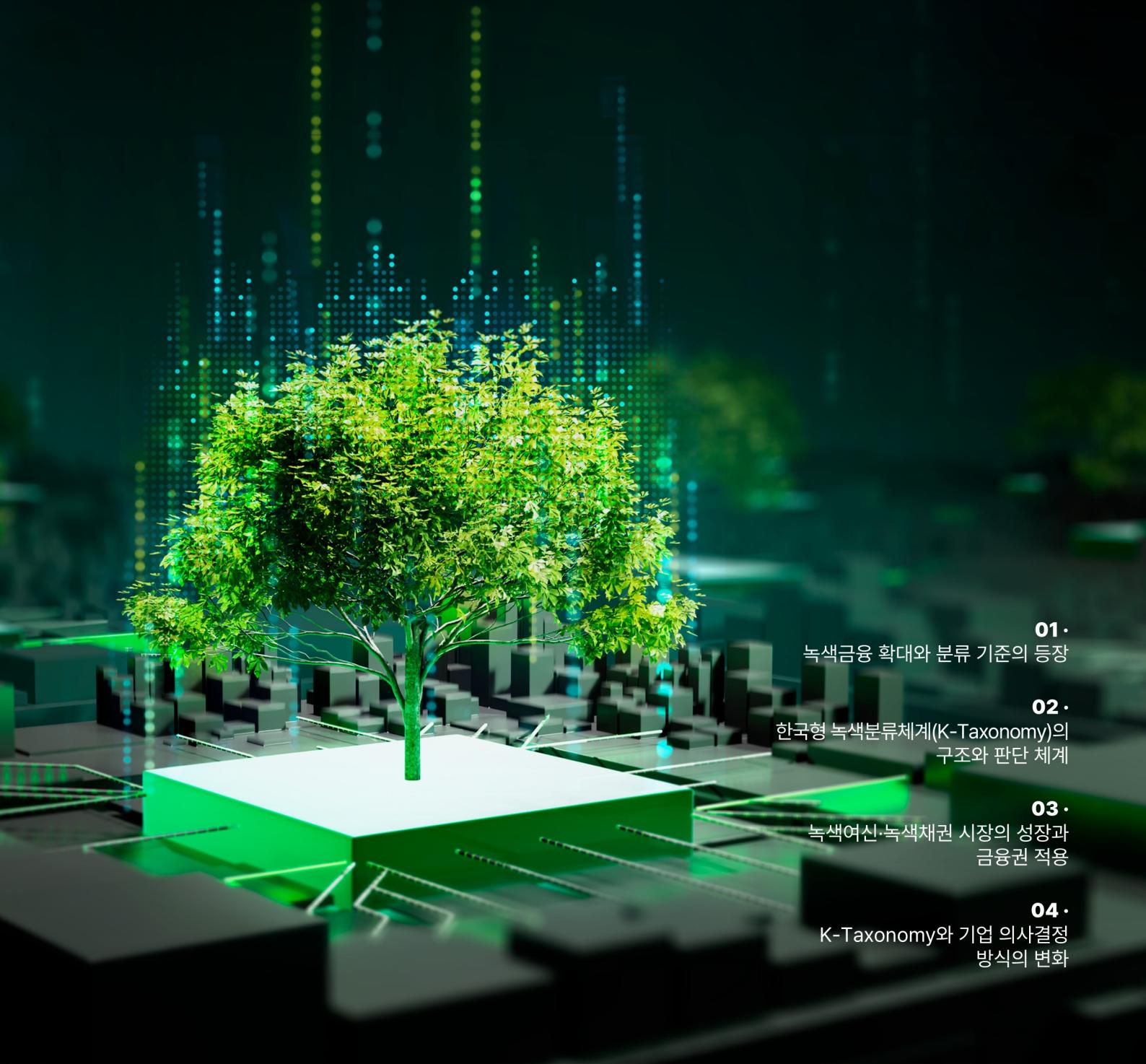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바꾸는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

글 | Ackerton Partners, AI ESG본부 진현정 이사



01 ·
녹색금융 확대와 분류 기준의 등장

02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구조와 판단 체계

03 ·
녹색여신·녹색채권 시장의 성장과
금융권 적용

04 ·
K-Taxonomy와 기업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Executive Summary

녹색금융 확대와 분류 기준의 등장

- 최근 수년간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CBI 집계 기준 2024년 글로벌 녹색채권 발행은 'CBI Methodology 적격(Aligned)' 물량 기준 약 6,700억 달러, 2024년 GSS+ 신규 발행은 약 1.05조 달러(누적 5.7조 달러)로 보고됨.
- 시장이 성장할수록 동일 활동의 '녹색' 판단이 국가·기관별로 달라지는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명확하고 공통된 판단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주요국은 경제활동 단위에서 녹색 여부를 판별하는 Taxonomy를 도입하여 금융·공시·투자 판단의 공통 언어를 제공하고, 그린워싱 방지와 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구조와 판단 체계

- K-Taxonomy는 기업을 평가·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금이 투입되는 개별 경제활동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 녹색여신 관리 지침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 실무의 판단 기준으로 정착되고 있음.
- 녹색 여부 판단이 선언이나 이미지가 아닌, 자금 사용 목적·기술 기준·배제·보호 기준을 포함한 검증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면서, 금융·공시·투자 판단 전반의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이 강화되고 있음.

녹색여신·녹색채권 시장의 성장과 금융권 적용

- 자본시장에서는 녹색채권이 장기·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에너지 전환·저탄소 인프라 분야의 핵심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자금 사용 목적 관리와 사후 공시가 표준적 요구사항으로 작동하고 있음.
- 은행 중심 금융에서는 녹색여신이 탈탄소 투자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기후·전환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며,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와 ESG 성과 지표로 연계되고 있음.

K-Taxonomy와 기업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 에너지·전력, 제조, 건설·부동산, ICT·데이터센터는 녹색금융과의 연계 가능성이 자본 접근성과 직결되면서, 감축 설비 투자, 재생에너지·PPA, 에너지 효율 개선 등 금융 연계형 사업 구조 설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기업 전반에서는 투자·기술·재무·ESG 부서 간 협업과 데이터 관리 체계가 중요해지며, K-Taxonomy는 투자 판단을 강제하지 않지만 사업과 자본을 연결하는 설명 프레임으로 중장기 전략에 활용되고 있음.

01 녹색금융 확대와 분류 기준의 등장

1.1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의 급격한 규모 확대

최근 수년간 녹색금융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규모를 확대해 왔다. 특히 녹색채권은 에너지 전환, 저탄소 인프라 구축, 친환경 교통, 지속가능한 건물 투자 등 대규모이면서도 장기적인 자본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서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Climate Bonds Initiative(CBI) 집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글로벌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CBI가 자체 Methodology로 '적격(Aligned)'으로 분류한 물량 기준 약 6,700억 달러로 보고된다. 같은 출처에서 2024년 'aligned GSS+'(녹색·사회·지속가능·지속가능연계 채권) 누적 규모는 약 5.7조 달러에 이르며, 2024년 한 해 신규 발행만 약 1.05조 달러로 기록되었다. 이는 녹색채권이 단기적 캠페인형 금융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일정한 깊이와 연속성을 갖춘 자금조달 채널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국내 시장에서도 녹색채권 발행은 확대되고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접목해 발행되는 '한국형 녹색채권'은 2024년 약 5조 1,662억 원 규모로 발행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글로벌·국내 모두에서 녹색채권의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자금이 실제로 어떤 활동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설명 가능성과 비교 가능성이 중요해졌고, 그 결과 녹색 여부를 판단하는 분류 기준(Taxonomy)의 필요성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1.2 녹색금융 확대에 따른 판단 기준 정교화의 필요성

녹색금융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자금이 실제로 어떤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함께 본격화되었다. 녹색채권과 녹색여신의 발행과 취급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사업이 금융기관이나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녹색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이는 녹색금융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현상은 녹색금융이 초기 확산 단계에서 점차 주류 금융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에는 다양한 해석과 적용이 병존할 수밖에 없으며,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될수록 판단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된다.

특히 투자자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금이 환경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녹색 여부를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자금 사용 목적과 환경적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이 필요해졌음을 의미한다.

결국 녹색금융의 양적 확대는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의를 촉발했으며, 이는 녹색금융 시장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 녹색분류체계의 정책적 의미와 글로벌 확산

이러한 배경에서 주요 국가들은 녹색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분류 기준, 즉 Taxonomy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Taxonomy는 개별 기업의 환경 성과를 직접 평가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자금이 투입되는 경제활동 단위에서 녹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체계다. 이를 통해 금융, 공시, 투자 판단 전반에서 공동의 언어를 제공하고, 녹색금융 시장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분류 기준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Taxonomy를 제도화한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EU는 녹색금융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기준의 혼선과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경제활동을 기술적 기준에 따라 정의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EU 역시 모든 산업을 일괄적으로 배제하거나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일 업종 내에서 환경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을 선별적으로 포함하는 접근을 취했다는 점이다. 이는 분류 기준이 이상적인 환경 기준을 선언하는 도구가 아니라, 전환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선택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임을 보여준다.

이후 Taxonomy 개념은 EU를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각국은 자국의 산업 구조와 정책 목표에 맞춰 분류 기준을 검토하거나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녹색채권, 지속가능채권, 녹색여신의 판단 근거로 Taxonomy 개념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류 기준은 법적 강제력을 가진 규범 이라기 보다는, 금융과 정책을 연결하는 준제도적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 구조와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된 제도다. K-Taxonomy는 EU를 포함한 국제 논의를 참고하되, 한국의 에너지 믹스와 산업별 배출 구조,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성된 체계를 채택했다. 이는 한국형 녹색금융이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산업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K-Taxonomy는 녹색금융과 기업 의사결정을 연결하는 기준으로서, 글로벌 논의와 국내 정책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이후 장에서 살펴볼 녹색여신과 녹색채권의 실제 적용, 그리고 기업 의사결정 변화의 출발점으로 작용한다.



0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구조와 판단 체계

2.1 제도의 목적과 기본 설계 방향

K-Taxonomy의 핵심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금융과 연결하는 데 있다. 이는 기업 전체를 녹색 또는 비녹색으로 구분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자금이 투입되는 개별 활동이 녹색금융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러한 설계는 기업의 다양한 사업 활동 중 일부는 녹색금융과 연결될 수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즉 K-Taxonomy는 기업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행위'를 분류하는 제도다.

2.2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의 구성과 정책적 함의



녹색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 전환, 오염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6대 환경 목표 달성을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운송수단 제조, 에너지 효율 개선 설비 구축 등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 개정을 통해 녹색부문 내 경제활동은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었다. 재생에너지 활동은 발전원별로 세분화되었으며, 히트펌프와 ICT 기반 에너지 관리와 같이 기존 분류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기술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또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공정별 온실가스 감축 활동, 녹색건축 기준의 상향 및 국제 인증 반영, 임업 분야 신설, 기후변화 적응 활동의 체계적 정리 등이 이루어졌다. 이는 녹색부문이 선언적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산업 활동과 기술 수준을 반영한 분류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전환부문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이들 산업은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단기간에 완전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동일 업종 내에서 최상의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활동이나, LNG, 원자력, 블루수소, 친환경 선박 등 과도기적 성격의 활동을 한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이상적인 목표와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제도적으로 조정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파일 다운받기

버튼을 눌러주세요